

# 통일 한국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ibrary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for the Unified Korea

박미향 (Mihyang Park)\*\*

### 초 록

학술과 문화 기반의 비이념적 정보교류협력은 비정치적이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민족 동질성과 신뢰회복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남북한 협력사업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일 한국을 대비하여 단계적인 남북한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도서관을 매개로 한 남북 문화교류협력에 관한 방안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관련하여 북한도서관의 기능과 한계 및 현재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활용성을 살펴보고, 그간의 도서관교류협력사업을 남북한 문화분야 협력사업이라는 틀 안에서 검토하였다. 이에 협력 거버넌스 체계구축 등 다섯 가지 협력안을 기반으로 남북 도서관교류협력의 단계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 ABSTRACT

Non-ideological inform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based on the scholarly and cultural fields would be the most effective project of south and north Korea for gaining the national homogeneity and trust in the long-term perspective. In this context, this study researched the measures on 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through national libraries for the unified Korea. Related with that issue, this study analyzed function and limitation of national library in north Korea and evaluated library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frame of cultural cooperation project. So, this study suggested the stepwise model of the library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based on the five practical measures including the cooperation governance system.

키워드: 남북협력, 문화교류협력, 북한도서관, 인민대학습당, 국회도서관, 도서관협력  
South and North Korea cooperation, 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national library, Grand People's Study House, National Assembly Library,  
library cooperation

\* 본 연구는 2016년도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과정 정책과제 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국회도서관 정보봉사국 자료수집과장(npoya@nanet.go.kr)

■ 논문접수일자: 2017년 2월 15일 ■ 최초심사일자: 2017년 3월 2일 ■ 게재확정일자: 2017년 3월 22일

■ 정보관리학회지, 34(1), 317-340, 2017. [<http://dx.doi.org/10.3743/KOSIM.2017.34.1.317>]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태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전반적으로 어둡고, 대북정책과 국가위기관리문제는 주요한 정책의제로 부상되었다(전성훈, 2010; 이상호, 2010). 특히 2016년 현재 북한은 지속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속에 제7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통치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남한은 2013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제시하였으나, 북의 핵개발과 핵실험에 대응하여 강도 높은 대북제재와 압박 무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남북 경제협력의 교두보역할을 하였던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10일 폐쇄되어 현재 남북경협은 모두 중단되었기에 그간의 남북교류의 경험들이 사장될 위험에 놓여있고, 이후 새롭게 재개될 경우에도 무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남북한 관계는 1974년 7·4 남북회담이후 남북교류의 역사 이래 최고조의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통일이 한민족의 정체성확보와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망을 상호공유하며 장기적으로 진전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북한정권은 분명 구시대적 나쁜 정권이기는 하나, 정치적으로 잘 다뤄야 하는 대상이고, 냉전시대 논리보다는 실리시대 논리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 전망에서 본다면 남북통일보다는 통일이전 교류협력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인 듯하다. 즉 북한을 변화시켜 나가는 지속적인 통합의 과정(process)으로서 통일을 전망해야 하고, 결국 우리의 현재적 과제는 각 분야에서 민족이해와 개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교류협력을 발전시켜 미래세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2016년 8월말 현재 매달 100여 명씩 총 29,688명(남자 8,684명 여자 21,004명)<sup>1)</sup>이 남한사회로 유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과 한민족공동체 통합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 상호 이해증진 및 관련 정책연구가 중요하다 하겠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화적 협력의제개발을 통해 비이념적, 비정치적 교류협력을 전개하는 것이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시급하게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즉 단계적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남북한 정보격차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간 이해도를 높여 이를 기반으로 보다 민감한 정치와 경제 이슈를 풀어 나가야 한다.

통일이나 통합에 대한 고민이 펼쳐질 때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이 시급한 이슈가 되는데 실제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70여년을 상이한 정치 사회 문화체제에 적응된 후, 갑작스럽게 재결합되었을 때 심리적 문화적 정보적 격차를 단기간에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정보적 격차를 좁혀 줄 수 있는 사회, 경제, 문화, 기술 등 소위 하위정치(low politics) 영역에서의 협력은 국방, 안보, 외교 분야 등을 다루는 상위정치(high politics)

1) 통일부 통계자료 참조(북한이탈주민정책 입국현황,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cited 2016. 9. 22]).

영역과는 직접적 연계가 미약해 보여도, 실질적으로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김국신, 2016). 이에 따라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실질적 통합에 기여할 각 사회체제의 부문을 구성하는 전문분야를 기반으로 한 교류 협력은 비정치적이면서도 가장 정치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는 남북의 협력사업 영역이다.

그동안 지식과 정보, 문화협력의 주요한 축이 되어야 할 도서관 분야에서 남북 협력경험이 실질적으로 축적되지 못하여 도서관분야의 지속 가능한 협력 수준을 향상 하는 데에도 많은 한계가 노출되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첨단과학기술발전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삼고 있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보취득기술과 시스템을 보유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이고 있다. 이에 북한 주요도서관의 전자도서관현대화사업과 체제 내부 인트라넷을 통한 네트워크 확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그간의 남북교류와 장마당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정보요구와 불만족은 그 어느 때보다 팽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도서관이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문화교육기관을 북한 정치사회적 변동의 미시적 기초로 활용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할 수 있다. 즉 현재 불확실한 남북 정세 속에 막혀있는 남북교류에 있어 전자도서관교류사업 등 북한정권도 관심있어 하는 실질적 협력의제로 소통하면서 북한사회의 개방과 북한주민의 정보적 욕구와 상호이해를 진작할 수 있는 사업을 도서관 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남북한의 장기적 통일 또는 통합을 대비하여 단계적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 문화협력이라는 범주를 재조명하

여 국회도서관과 인민대학습당을 중심으로 정보문화교류협력의 의제발굴을 하고자 한다. 이 주제는 향후 통일과정에서 도서관이 남북한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사회에 대한 이해를 진작시키며, 민족정체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남북한 주민들이 일상적 정보요구에 따라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들을 넓혀나가는 데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도서관간 정보교류 협력이 향후 사회통합과 한민족 상호이해에 어떤 방식과 방향성을 갖고 기여할 것인가에 대하여 북한 도서관분석과 사례조사, 그리고 그 간의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논의할 것이다.

##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구체적인 범주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성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국가도서관 수준과 현황에 대한 자료조사를 기초로 북한사회 정보환경에 대한 이해 및 정보정책의 배경과 논리 그리고 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북한도서관의 사회적 목적과 이용실태에 대한 문헌조사와 북한이탈주민 및 탈북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을 진행할 것이다. 둘째, 통일과 통합과정에서 남북한 도서관 정보격차 해소 및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도서관 정보교류관련 남북 협력을 위한 선행 사례를 검토한다. 관련하여 남북문화교류의 현황 및 과정에 대한 조사와 도서관관련 남북교류협력의 사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협력을 위한 정책적 대안

을 제안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정보적 요구에 대한 과학과 현실적 측면에서 도서관교류협력을 진행시킬 수 있는 협력모델을 도출한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 도서관협력이 정보문화와 학술협력의 기반이자 한반도의 정보환경을 개선해 나가며 비정치적 교류의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한 주요 정책의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북한도서관의 설립과 사회적 활용

먼저 북한의 도서관에 관한 문헌조사 이전에 제기한 근본적인 질문은 과연 북한이 분단 이후 70여년 넘게 축적된 다양한 지적 생산물들을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온전히 보존하고 있을 까라는 의구심이다. 북한 현대사를 도서관과 연결하여 살펴본다면 특히 1967년 5.25교시가 나온 전원회의가 눈길을 끈다. 이 회의를 통해 소위 김일성반대파인 갑산파와 중앙당 엘리트의 대대적 숙청을 통해 다양한 반문화적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다. 노동신문 최초의 여성 편집국장이었던 김원주의 딸 성혜량의 저서에 따

르면 '67년 5.25 교시는 누가 숙청되었다는 것보다 반수정주의 투쟁이라는 대선풍 아래 대대적인 인텔리 제거, 그들의 창조물인 문화에 대한 총공격, 좌경극단주의에 의한 반문화 혁명으로 기억한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 대체적으로 60년대까지는 살기 좋았고, 67년 5.25교시 전까지는 '북조선은 그래도 사회주의 인민의 나라였다. 그러나 5.25교시를 계기로 계급투쟁과 프로독제의 강화, 수령우상화의 심화, 인텔리 혁명화를 몰아치는 가운데 사회 전반에 극좌적인 바람이 불어닥쳤다'고 한다(성혜량, 2000).<sup>2)</sup> 이 중 도서관사적 측면에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가 '책의 말살' 즉 대규모 '도서정리사업'이었다. 당시에 직장마다 제지공장으로 실려 나가는 책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양서였고, 남은 것은 체제와 수령 찬양의 정치서적, 그리고 김일성수령 노작과 교시집이었다고 한다.

위와 같은 북한 정치시스템이 확대재생산한 도서관체제에 내포되는 도서관운영 철학의 경직성과 장서구성의 근본적인 한계와 편중성을 인정하고, 다음으로 북한도서관의 목적을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 <조선말대사전>에 따르면 도서관은 책을 비롯한 출판물들을 정비, 보관하고 사람들

2) '5.25 교시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된 도서정리 사업은 거의 7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전국의 모든 가정, 모든 직장의 책 페이지가 일일이 검열되는 방대한 캠페인이 있었다. 이 지구상에 북조선만큼 철저하고, 무지막지한 노력투하를 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북조선 땅이 아무리 좁고 인구가 유한하다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책의 페이지(같은 제목의 100권의 책이면 그 100권이 모두) 검열대상이 된다면 그 페이지가 어느 만큼이겠는가, 페이지에 있는 글줄이 모두 검열대상이라고 쳐 보라. 글자 하나 하나가, 도서정리는 당에서 문제라고 제기하는(삭제대상) 내용과 어투, 인명을 삭제하는 작업이다. 물론 제지공장으로 가야 할 책 명단은 따로 있고, '제한이용'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책에 대해서 말이다. 기준은 수령 우상화, 항일무장투쟁의 절대화, 계급혁명 즉 반수정주의, 반부르주어 문화였다. 이것에 저촉되는 모든 것을 먹으로 칠하거나 페이지를 뜯어내거나 종이따지를 붙이는 작업이었다. 그 작업의 막대함은 둘째치고 내용의 규제가 문제다. 수령우상화를 위해 역사를 뜯어 고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드러운 문구'까지 지웠다.'

이 널리 읽을 수 있도록 빌려주는 문화기관이고 북한의 도서관은 도서선전과 책읽기 지도를 통해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을 촉진하며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임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힘있는 수단이며 나라의 귀중한 문화재를 보관 관리하는 중요한 문화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편, 1992). 이처럼 북한의 도서관은 과거 소련의 영향을 받아 레닌의 러시아혁명이후, 인민의 평등, 자본주의와의 투쟁, 문맹퇴치에 대한 처방으로 강조되었던 소련 만민도서관과 유사한 철학을 기반으로 확산되었다. 즉 사회주의 체제의 도서관은 사회주의적 의식화와 인격형성 등 정치교양과 이념교육의 학습장소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강조가 지배적인 도서관 운영 철학으로 팽배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도서관의 역사는 이와 같은 인식에서 시작되었으며 김일성은 당시 새로운 사회와 북한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다수 인민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고, 그 수단과 방법으로 도서관을 중요한 사회적 도구로 생각했을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은 해방이후 도서관사업을 국가경제계획에 기본적으로 포함했고,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을 발표하면서 도서관사업을 당과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과업으로 규정하였다(백과사전출판사 편, 1998). 이에 따라 도서관을 혁명사업의 주요 수단('문화기관, 사회교육기관, 교양기관')으로 삼고 도서관확대사업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포함해 국가 정강정책으로 내세웠다. 이후 북한도서관 건설사업은 계속 진행되어 도서관의 질적

문제를 떠나서 북한은 1990년대 초에 전국적으로 15,000여개의 도서관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송승섭, 2008).

오래전부터 북한은 분단이후 사회주의 계획업무의 정보화 등에 대한 논의에서 정보망이라든가 정보기술에 대한 개념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획화 정보수준을 높이고, 생산잠재력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경렬, 2002). 허나 정보화의 기본 개념에서 남한과 유사한 부분도 발견되고 있어 컴퓨터망 체계를 통한 생산부분들 간의 연계, 선진과학기술의 수용을 통한 과학기술의 선점(황한욱, 2003) 등을 강조하는 연구들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 우리가 가장 크게 유념해야 하는 부분은 정보기술에 대한 북한의 인식 자체가 도구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자력갱생이나 주체를 강조하는 폐쇄적인 체제의 보전 및 교정을 위한 수단으로 정보기술과 정보화를 인식하고 있어서, 진정한 정보사회의 특징과 장점을 살리기 어려운 북한 체제 특유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폐쇄적인 북한 체제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써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서 자본주의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체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만을 받아들일겠다는 선별적인 개방정책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개방성과 공유의식이 전제되는 정보기술이나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그들의 체제유지선 안에서만 장려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실제 사회주의 체제내 일상생활 속 도서관과 이용자에 대한 질적 고찰연구는 찾아

보기 어려웠고, 현재 경직된 사회구조 내에서 정보이용과 도서관이용실태를 학술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은 진행하기 어려웠던 것이라 분석된다. 추후 북한 탈북주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속의 도서관활용과 정보이용행태 연구를 통해 국가통합 전후 북한도서관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고, 이를 위한 남북간 도서관교류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2.2 인민대학습당의 목적과 한계

북한의 국가도서관은 해방 후 평양에 신설되어 한국전쟁 중에 일부 파괴되었거나 커다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953년부터 중앙도서관 복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파괴된 청사를 보수정비하고 따로 보조 청사를 신설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1963년 10월에 현대적 설비를 완전히 갖춘 새 청사를 마련하였다(사회과학출판사 편, 1971). 현재 이 도서관은 1982년 4월부터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인민대학습당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해당 건축물은 김일성광장 주석단 바로 뒤에 한옥형 지붕의 전통양식으로 지어졌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큰 건물인데, 이는 북한 경제가 이미 추락하는 시점에 들어서게 된 거대한 건축물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김정수, 2016).<sup>3)</sup> 80년대 초반에는 김일성의 70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조성한 국가시설인 만큼, 건축적 조형미와 김일성의 업적 등 우상화작업에 기여함을 강조하였으나,

차츰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하는 주요 거점과 사상학습의 장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17세 이상의 공민권을 갖은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한 인민대학습당의 하루 수용능력은 12,000명 선으로 이용자들은 자기의 전공분야에 따라 강의도 받고 열람도 할 수 있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열람실에는 6,000여석의 좌석이 있으며 800여석 규모의 강의실 및 시청각실이 마련되어 있고, 전국의 100여개 과학연구기관, 공장, 기업소들과 컴퓨터망을 연결하여 과학기술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평화문제연구소, 2005). 특별히 1992년 1월, 신년사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400여석의 자연과학강의실에는 과학기술개발 3개년 계획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를 통해 인민대학습당이 국가사업을 직접 지원하고 확산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학습과 그 토대를 마련하는 정보기지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 학습의 장으로 한층 더 다양하게 국가도서관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동신문을 통해 보여지는 2000년대 인민대학습당의 운영상의 주요사항은 김정일이 2011년 40여 차례에 걸쳐 940여 종 8,740부의 도서를 인민대학습당에 보냈고, 총 건수는 60만종 70만부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김정은도 2012년 36차례에 걸쳐 18,800부의 도서자료를 보냈다는 내용이다(송승섭, 2016). 이와 같은 사회적 위상과 정치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인민대학습당은 실질적 정

3) '1982년 김일성 탄생 70돌 기념비인 주체사상탑, 인민대학습당, 평양빙상관, 창광원 수영장, 1989년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대비해 만들어진 청춘거리(안골 체육관)와 대규모 아파트들이 지어짐 → 북한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 현상이라 할 수 있음'

보이용에 있어 제한이 많은 장서구성, 활용할 수 있는 원문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미비, 더불어 체제이념적 소장자료와 편향적 정리기준 등으로 인해 포괄적인 국가차원의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사회적 활용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노출된다 하겠다.

특별히 북한은 2000년 이후 “정보기술산업을 통한 단번도약”을 역설하면서, 1990년대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보관련 산업육성을 강조하였고, 일련의 흐름 속에 국가적 차원의 대표도서관들의 전자도서관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이 전자도서관의 초기 목적은 북한 전역의 도서관들과 통신망으로 연결,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으로 전민이 이용 가능한 정보봉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김기현, 2001). 현재 북한은 전국의 주요 도서관들을 인민대학습당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전일적인 정보자료 봉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도 병행 추진되고 있으며,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중앙과학기술통보사를 비롯한 주요단위들의 정보자료를 하나의 망으로 연결하여 정보자료의 공유체계를 세우고 있다.

인민대학습당은 연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과학 및 기술분야 종사자와 학생들이 주 이용자집단이고, 지방 이용자도 연 4만 명 정도이며, 현장 지원을 하는 봉사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독특한 국가도서관 체계는 일종의 독재적 중앙집중화현상으로 인민대학습당이 전 사회의 지식인 양성의 중심 기지이자, 학술기관과 연구소, 종합대학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측면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송승섭, 2016). 다시 말하자면 북한은 ‘사

회교양중심기지’로 인민대학습당을 표현하며 북한 전역의 도서관운영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지도운영을 하고 있으며, 평양 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도서관으로서 평양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에도 기여하는 사회적 역할도 하고 있다. 최근까지 인민대학습당은 ‘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이며 주체건축예술의 자랑’, ‘진민학습의 기지 또는 대전당’으로 선전되며, 북한 체제의 고유한 사상교육을 전파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해외 국가대표단의 주요 참관시설이 되고 있다. 참고로 인민대학습당 관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기도 하다. 북한에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인민대학습당은 남한의 국회도서관과 유사한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하겠다.

### 3. 남북한 문화협력사업

#### 3.1 남북한 문화교류사업과 도서관협력

남북한 관계는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통과, 그리고 2000년도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6.15공동선언 등 일련의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정치적 합의를 통한 남북한 관계개선을 이루어왔다. 특별히 2000년도 이후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남한 도서관계 내에도 북한 도서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을 제시해주었다.

남북한 문화교류사업에 대한 광의적 접근으로서 남북교역은 분단국인 남북한 사이에 이루어

어지고 있는 모든 물자거래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민족내부간 거래라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 이유는 남북한 사이의 교역은 국제사회에서 국제분업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역이 아니라 민족 내부적 특수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역으로서, 단순한 경제적 측면을 넘어서 '통일의 과정'을 반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역이기 때문이다(권영경, 2016).

이런 맥락에서 남북교역에는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두 국가간 거래형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비상업적 거래가 상업적 거래와 함께 구성되어 있다. <표 1>은 2005년 이후 남북교역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준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비상업적 거래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와 남북한 사이의 사회문화교류를 위해 이루어지는 사회문화교류사업, 북한의 핵동결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경수로사업, 중유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남북 도서관교류협력사업은 비상업적 거래 중 사회문화협력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겠다. 이처럼 남북의 접촉은 주로 남북 당국간 그리고 정치적 차원의 것으로서 경제협력이나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와 연결되었고, 점진적이지만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 여기서 사회문화교류의 의미를 법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표 2> 참조).

<표 1> 2005년 이후 분류된 남북교역형태

대구분	소구분	거래유형
상업적 거래	교역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경제협력사업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기타 경제협력사업
경공업협력사업	경공업협력	
비상업적 거래	대북지원	민간지원
		정부지원
	사회문화협력사업	사회문화협력사업
	핵동결 대가	경수로 건설, 중유지원

<표 2> 사회문화교류의 법적 의미

법조항	내용
남북기본합의서('91.12.31)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92.9.17)	제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98.5.12)	제3조: 이 규정에서 "사회 문화분야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 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 실시 및 사후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법적 의미에서 북한과의 사회문화교류는 민족이해와 동질성회복을 위해 문화, 학술, 교육, 예술, 출판물 등 사회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진작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활성화된 대북지원활동을 기반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남북교류의 급격한 확대는 공공 및 민간부문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교류이외에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고, 추진된 사업 중 주목할 만한 사례를 살펴본다면, 먼저 강원도는 남북으로 갈려져 있지만 ‘강원도’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도’로서 남북 강원도가 갖고 있는 유사한 환경조건을 이용하여 농림수산 분야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였다. 더불어 전라북도 남원시가 추진한 방북공연인 겨레가 함께 하는 ‘춘향전’, 목표시가 신의주시를 상대로 하여 진행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교류협력 추진사례 등이 있다.

한편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간접적 사례로 제3국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교류 협력과 해외동포돕기 사업이 있다. 추진사례로는 경상북도 구미시가 추진한 중국 심양 및 러시아 사할린 동포 돕기, 충청북도 옥천군이 지원한 중국 연변 지용문학 축제,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이 추진한 중국 장백산 자연박물관과의 학술교류 등을 꼽을 수 있다 (최용환, 김영수, 조봉현, 2009). <표 3>은 남북협력사업 승인 현황으로써 그 중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흐름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도 보여지듯이 대북지원 사업의 활성화는 1995년 북한의 ‘큰물’이라고 말하는 수해피해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면서 시작되었고, 특히 민간에서는 1987년 이후 한국사회에 성장한 시민사회의 존재와 이들이 종교단체 등과 연대하면서 지원활동의 중추세력이 되었다(이우영, 2016). 이러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은 긴급구호에서 점차 개발협력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졌다. 이러한 사업이 이명박 정부이후 남북관계가 다양한 요인으로 악화되면서 각 분야의 대북지원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하여 2010년 5.24조치 이후에는 <표 3>에서 보여지듯이 중단된 채로 거의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개성공단까지 전면 중단되어 현재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신냉전’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표 3> 남북 협력사업 승인 현황<sup>4)</sup>

구분	'91~'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경제	민간 경협	11	5	1	2	6	10	4	6	9	1	19	-	-	74
	개성 공단 승인	-	-	-	-	17	26	15	163	53	10	6	1	6	291
	신고	-	-	-	-	-	-	-	-	12	11	18	21	41	
사회문화		17	6	7	13	16	47	26	19	3	-	1	1	-	156
계		28	11	8	15	39	83	45	188	65	23	37	20	27	562

4) 이우영(2016)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교육자료 참조

2000년도 이후의 학술 문화분야 협력사업에서 도서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남북한 협력사업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별히 출판물과 학술분야의 남북한 협력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증하였고, 이는 동서독 통일전 독일

의 협력사례등과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협력내용을 보면 대학, 연구소, 민간단체들이 주관이 되어 비이념성자료(리조실록, 동의보감, 언어, 조선고전문학선집, 민속, 그리고 자연과학 분야의 학술지 및 연구논총과 사전류 등)부터 교류협력을 시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표 4> 문화분야 남북한 협력사업 현황<sup>5)</sup>

사업자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비고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나진 선봉시 행정경제위원회	나진 선봉내 과기대 설립, 운영	
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	금강산국제그룹	남북 문화정보화 사업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북한문화자료 정보화사업	
(사) 평화문화연구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향토대백과> 편찬, 출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앙과학기술통보사	백두산 자연중서 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자원교류 및 데이터베이스화 사업	
(주) 영진닷컴	인민대학습당	도서공동번역 및 출판협력	
(사)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민화협	겨레말 큰사전 공동편찬	
(사) 한국정치학회	조선사회과학자협회	광복60주년기념 남북공동국제학술회의 개최	
남북역사학자협회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	개성의 세계문화유산등재 지원을 위한 남북공동 학술회의 개최	
(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북측저작권사무국, 민화협	북측 저작권 대리, 중개관련 합의와 저작권교류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북측 조선의학회, 민화협	북한 보건관련 학술회의 개최	
고려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북한대의전탐중국, 출판물교류 협회	북한전통문화 기록화사업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김일성 종합대학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현대화사업(06-07)	
(사)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 북한, 러시아, 몽골,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어린이들의 그림 300점 전시 - 북한어린이그림과 생활사진전시 및 '북한문화 이해 프로그램' 등 부대행사	장소: 종로구 어린이도 서관
(재) 한국공예문화진흥원	대의전탐중국	- 남북교류공예전: 남한 중요무형문화재와 북한 의 인민예술가와 공훈예술가 등의 작품을 출품 - 총 4개주제(옷차림, 상차림, 집꾸밈, 멋내기)로 전시됨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남북문화재도서전으로 국내 문화재 관련자료 및 북한 문화재 관련도서 전시	
문화재청,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민족화해협의회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로서 유적의 서북지구를 대상으로 유구의 분포양상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 조사	
연합뉴스, 일본교도통신사	조선중앙통신	고구려 고분벽화사진 121점을 서울전시에 이어 평양에서 전시	평양 조선역사박물관

5) 이우영(2016),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교육자료 참조

어 출판물 교류협력이 늘어나면서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남측창구로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측창구는 저작권사무국이 대외적인 저작권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동안의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문제점 또는 유의사항으로 분석되는 부분은 나라간 첨예한 정치 이념과 군사적 대결구도 속에서 북한은 특히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해 왔다는 점이다. 해당 사업의 특성상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부분은 미미한데 비하여 주민 의식과 일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 있어 좀 더 근본적인 파급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파악된다. 이에 따라 교류협력의 주제선정이나 행사추진에 있어서 일회적 성격이 농후하고, 남북 교류협력의 양상은 남한위주의 일방통행의 교류협력이 그동안 주를 이루었다는 점 등은 한계로 남는다고 하겠다.

### 3.2 남북 전자도서관협력사례

그동안 진행되었던 대표적 남북도서관간 교류협력사례로는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현대화사업이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사업은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60주년 기념사업으로 계획된 '교육현대화 및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005년에서 2006년까지 1년간의 협상기간을 거쳐 2006년 8월부터 2007년까지 남측 관계자들이 김일성종합대학에 방문하여 공동 작업으로 전자도서관구축사업이 진행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시스템 구축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사업으로서 남측에서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구축에 필요한 기술과 시스템을 제공하고 북측에서 구축한 서지정

보와 원문정보를 남측이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프로젝트였다.

이 사업은 도서관 분야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직접적인 교류협력사업이었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당시 비용분담, 위험분산, 향후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심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업을 위해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남측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대표사업자로 하고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과 '한양대학교'가 사업파트너로 참여하고, 북측에서는 '민족화해협의회'와 '김일성종합대학'이 사업파트너로 참여하였다. 이 사업은 다음 협의의 아래 추진되었다.

- 북측은 구축된 서지목록과 공개 가능한 원문 콘텐츠를 남측에 제공하고, 저작권을 양도함으로써 구축된 서지 및 원문 콘텐츠를 남측에 제공
- 구축된 서지정보와 원문 활용을 위해 남측에 미러서버를 운영
- 남측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경비부담
- 북측이 서지 및 원문 구축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부담
- 남측이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총괄 기획 및 기술 제공

해당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표 5>와 같다. 전자도서관 협력사업은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소장자료의 목록 및 원문 DB 구축작업을 기반으로 남북 대학 간 지속적인 콘텐츠 교류와 도서관 운영 관련 공동개발 및 교류를 안정화시킬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표 5〉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현대화사업<sup>6)</sup>

구분	내용	비고
주관단체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2005.6 의향서 체결 2006. 사업합의서 및 부속 합의서 체결
참여기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한양대학교	
대상기관	민족화해협의회, 김일성종합대학	
사업내용	- 전자도서관시스템의 총괄적 개발 및 제공(도서관업무자동화(LAS), 디지털 도서관(DL) 프로그램, 정보검색용 웹시스템 구축) - 출입관리, 바코드, 학생증발급시스템 등 부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자도서관 운영을 위한 부대장비 및 소모품을 제공 - 고문헌 등 희귀자료 디지털화 지원	2006. 남측에 전달예정인 컨텐츠목록(4,000건) 확보

이에 서지목록작업 및 디지털화 작업은 김일성종합대학교 사서들이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남측에 제공될 서지목록 및 원문CD와 공개 가능한 원문데이터를 확보하였다. 해당 사업은 당시 기술적 측면에서는 남북 도서관 표준을 수용한 최초의 전자도서관프로그램을 채택하고 도서관시스템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교류의 공동개발 가능성을 조성하며 공동사업 경험 축적으로 이후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교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더불어 김일성종합대학 소장 희귀자료의 디지털화와 학술적 이용을 통해 대북 학술정보 교류의 창구 역할과 남북 공동활용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끝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많은 아쉬움을 가져다 준다.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현재적 시점에서 남북협력의 공식적 성과로 남았다면, 우리는 학술분야에서 김일성종합대학 소장 희귀자료를 이용하고 학술, 연구, 세미나 등 다양한 대북 학술 교류의 정보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16년 김일성종합대학은 창립 70돌을 맞이했다.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은 첨단 시설을 갖춘 새로운 도서관으로 새롭게 꾸며져 개관되어, 북한은 교육발전을 추동하는 기념비적 창조물이며,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떨치는 최첨단 과학연구 성과가 이룩되었다고 자랑하고 있다(통일신문, 2015.12.18). 최기철(2001)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100여개 대학 및 120여개 단과대학에서 1만여명 정보기술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이들 대학은 전자도서관을 기반으로 정보통신 기술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남북한간 도서관 및 정보격차를 해소시키는 방편으로 도서관 정보활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북한 인력에 대한 IT 및 정보문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남북 정보협력의 한 사례로 점검해 볼 수 있다. 관련하여 2004년 미국 시라큐스대학이 북한의 컴퓨터 과학과 정보기술 분야의 대표적 대학이라 할 수

6)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2009년도 정기총회자료와 조왕근(2007) 자료를 종합 정리함

있는 김책공과대학과 연계하여 북한지역의 IT 인력을 시라큐스대학에서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이후 김책공대는 2007년 전자도서관을 개관했으며, 당시 한양대학교에서 김책공과대학에 컴퓨터 등 기자재를 지원하였다. 시라큐스대학은 현재까지도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과학기술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up>7)</sup> 또한 남한의 다양한 대북관련 사업주체들도 정보기술 교육사업이 북한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 하에 200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산하에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였다(나황균, 2007). 이후 북한의 대표 종합대학 전자도서관 현대화사업은 전국의 도서관 자동화와 네트워킹산업에 큰 영향을 주었고 현재 김정은 정권의 과학인재 엘리트양성 정책기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 4. 남북한 도서관교류협력방안

### 4.1 협력 거버넌스체계 구축

현재 북한과의 각 분야 교류협력추진을 위한 국내외부 환경이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국내 여론과 함께 남북교류를 제한하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절차가 존재하고 있다. 허나 장기적 전망에서 한반도의 통일의제는 조만간 다른 사회적 정치적 변화무드를 타고 표면화될 것이다. 이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는 현재의 어려운 상

황에서 보다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다.

교육문화교류사업 중 특히 도서관 영역은 이전부터 국민생활에 중요하나 정치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는 부분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현재 경색된 국내 정치 및 행정적 환경 속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유관 부처가 적극적인 의제들을 발굴하여 제안하기가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과의 비이념적 교류의제의 중요성과 역사적 의미를 대한민국 입법부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현재 법적으로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국립중앙도서관의 행정조직상의 위치가 해당 부처내에서 강력하지 않은 만큼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의 선제적 제안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와 입법지원기관으로 오랫동안 국가서지를 통한 학술 및 의회정보서비스를 해온 조직인 국회도서관이 준비하는 것이 초기단계에서 남북도서관 협력의제를 정치적으로 의미있게 확산시키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장기적 맥락 속에서 협력거버넌스체계 구축에 있어 국민대의적 기관인 입법부가 단계적 문화협력으로서 민족통합에 대한 준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회가 도서관 및 학술문화정책과 관련된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초로 남한 입법부의 대표적 정보수집 및 서비스기관인 국회도서관과 북한의 인민대학습당의 교류협력의제와 실천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남한의 일방적인 시혜가 아닌 남북 모두에게 장기적 이익이 되는 장기적 교류협력안건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 상호이해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7) 탈북연구자(50대 초반, 여성, 과학기술분야 전공, 현재 북한관련연구소에 근무) 증언 (2016.8.20 통일교육원에서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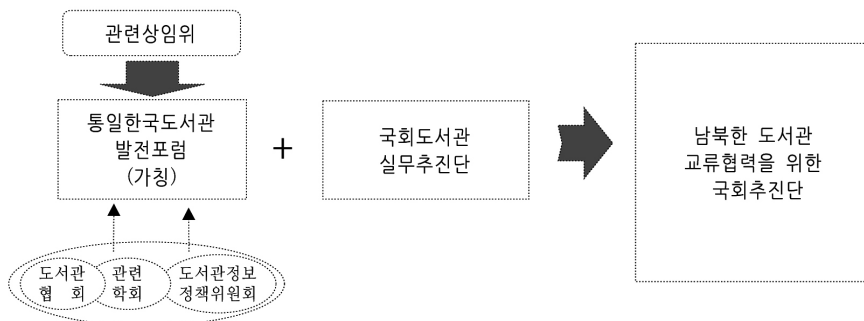
대의적 차원에서 모색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절대적 지위와 권한을 보유한 수령체제아래 수령의 정치적 무기로 조선로동당이 있고 그 아래 당과 인민대중을 연결하는 포괄적 체제로서 국가기구가 있다. 이 국가기구는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검찰소, 재판소, 공안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남한에 국회라는 단 하나의 의회조직이 있다면, 북한에는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라는 두 형태의 의회조직이 있다고 할 수 있다(정성장, 2016). 이에 대한민국 국회도서관과 북한의 인민대학습당의 교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상시적 교류협력의제 도출 및 발전을 위해 국회내 정책의제수렴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체제가 구성되어야 한다.

먼저 국회도서관과 인민대학습당의 도서관교류협력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실무적이고 일회적인 협력사업을 넘어 장기적으로 민족통합을 위한 국회와 의회도서관역할제고와 기반마련을 위한 제도적, 법적 정비 및 지원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림 1>은 대한민국 입법부 내 남북도서관교류협력을 위한 정책결정 거버넌스체계에 관한 제안안이다.

정책결정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문헌정보학계 대표자와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국회운영위원회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가칭 통일한국도서관발전포럼을 구성한다. 이후 국회도서관 실무추진단의 정책분석지원과 제안 등을 기초로 교육문화 및 학술정책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들과 국회도서관 등 차관급 이상 입법지원조직의 핵심인력 등으로 이루어진 국회추진단을 구성한다. 이 추진단은 정치적 영향력을 극소화시키고 업무적 자발성을 보장하기 위해 협의하에 주어진 기간 임기제를 보장해야 한다. 이 조직체계를 통해 남북 상호협력과 관련된 주요 정책문제를 기획, 관찰, 심의,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 속에 통일한국도서관발전포럼이라는 미래 한반도통일을 위한 남북한 도서관협력에 관한 입법부내 소통창구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부 등 관련 부처, 도서관협회, 문헌정보 및 관련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구한다. 참고로 한국도서관협회는 1990년대 남북도서관연구위원회를



<그림 1> 대한민국 국회내 협력 거버넌스체계 모형

구성하였다. 더불어 2006년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에서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World Library Information Conference)를 서울에서 개최할 때 WLIC 서울조직위원회는 IFLA 회원인 북측 도서관관계자의 초청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허나 정치환경에 좌우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에 따른 남북 교류사업의 취약성, 그리고 조직의 물적 기반과 정치적 관심 및 지지가 부족함에 따라 큰 실효성 없이 제안만으로 종결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 도서관정보교류협력은 300명의 입법기관이 활동하는 입법부를 통한 지속적인 정책의제 환기가 필요하고, 관련 국회의원 및 정책결정권자들의 관심과 정치적 지지가 필수적이다 하겠다. 장기적 관점의 정책 최고결정권자의 참여를 통한 협력 거버넌스체제를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남북 국가도서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서관 교류협력방안을 단계별로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4.2 남북한 통합국가서지사업을 통한 학술교류

현재 북한의 도서관에 관한 정보는 매우 한정되어 있고, 또 출판시장에 관한 정보도 거의 전무하다. 남북간의 문화 학술교류가 민간단체이든 공공기관 중심이든 언제나 정치적 제약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북한 탈북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도서관 장서는 아주 제한된 범위내로 구성되며 철

저하게 당의 관리하에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제가 원산에서 근무할 때 도서관을 많이 이용했지요. 군대에서 회계쪽 책임자였기 때문에 주로 경제, 회계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북한 도서관은 주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등 실용도서와 주체사상관련 자료가 대부분이지요. 큰 기대 안 합니다. 문학류 서적에 대한 욕구는 개인적으로 해결합니다...”<sup>8)</sup>

현재 북한의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피로감과 실망, 새로운 사회와 기회에 대한 열망, 그리고 자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 등 아주 구체적이고 생활적인 고민 속에서 북한이 제공하는 공식적 정보채널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다양한 비공식적 경로로 입수한 정보를 통해 개인 삶의 전환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식적 사회문화교육기관인 북한도서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겠다.

북한과의 도서관교류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도서관관계자 및 연구자들은 1900년~1970년 사이에 발간된 남측 미 소장자료, 해방전 녹음자료 및 영상자료, 한국학 관련 고문헌 등에 학술적 관심이 있다(정분희, 1993). 이에 따라 북한 주민 정보환경의 개선 및 공식적 학술교류의 장의 마련하기 위해 독일의 경우처럼 단계적 과정으로서 비정치적 학술적 분야부터 국가서지에 대한 공동작성과 관리를 시작하여 주요 학술정보에 관한 전자정보를 교류하는 등(Dankert, 2007) 다

8) 탈북주민(40대 중반 여성, 원산경제대학 재정금융학부 졸업, 북한에서 회계사로 근무, 아이 1명과 2013년 탈북) 증언(2016.10.7 통일교육원에서 면담)

각적인 각도로 학술정보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관련하여 한글문헌의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남과 북의 학술용어의 차이문제를 인식하고, 용어의 표준화 또는 용어간 연계를 위한 시소러스용어사전작업도 선행되어야 한다. 즉 남북한 생활언어뿐만 아니라 학술용어의 이질화현상도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 분야에 걸친 학술용어의 차이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용어간의 차이를 줄여주는 작업을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시급히 수행해야 한다. 2004년 북한의 과학원, 교육원, 한국의 산업자원부, 그리고 일부 대학이 참여한 남북 정보화 관련 IT용어 표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남북한 학술용어 표준화 관련된 국가 또는 민간사업들의 진행현황을 분석하여 이 사업들을 국가적으로 확대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장기적 차원의 남북한 국가서지 통합을 진행시키기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학술교류 사업이 될 것이다.

### 4.3 북한 도서관 현대화사업 지원

북한은 '정보기술'이라는 교과목을 초등교육부터 중요하게 다룬다. 정보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해당 교과과 내용은 많은 변화를 거쳐왔는데(조정아, 2016), 인민들이 정보기술을 일상생활의 정보이용에서 쉽게 활용할 있는 공간이 바로 도서관인 것이다. 이에 북한당국은 2000년 이후부터 북한 주요대학과 전국 각지에 컴퓨터를 활용한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과학 연구기관 및 모든 도서관과 전산망 체계를

형성하여 해당 도서와 자료를 쉽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강영실, 2016). 북한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에 따르면 정보기술이 과학기술 발전과 교육사업, 사회문화생활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한 과학기술이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교육에서도 전자도서관, 전자교육과 같은 새로운 교육방법이 도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2001.7.11).

이에 따라 전민의 과학기술인재화를 목표로 전국에 전자도서관 설립을 확산하여 국가적 차원으로 전자도서관 건립 붐이 일어났고, 2006년 현대적 시설을 갖춘 전자도서관을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처음 만든 것을 시작으로, 2007년 인민대학습당과 김일성종합대학 현대화 추진사업, 2010년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개관 등 인터넷과 데이터베이스에 바탕을 두고 전자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도서관 사업을 차례로 진행하였다. 당시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사업에 대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당시 종합대학 도서관은 가칭 KPMARC 및 기술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조선십진분류표를 사용하였으며 자료정리에 있어 더블링크어, MARC21 등 국제표준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조왕근, 2007). 물론 북한에서 시행하는 전자도서관 인트라넷은 국제사회를 비롯한 전 세계와 연결된 개방된 시스템은 아니다. 철저한 통제 하에 내부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정보자료 및 서적, 신문을 볼 수 있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접근가능한 체제로써 내부적 한계가 있다. 허나 전자도서관구축 등 도서관 전반에 걸친 현대화사업은 디지털화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서로 주고받는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정보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남북 주민의 상호이해수준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남북도서관협력의제를 발굴할 시 유용한 사업안건이라 하겠다. 이를 위한 남북 표준 MARC 공동개발 및 이용 등 도서관의 정보화, 표준화, 규범화를 위한 사업은 체제, 이념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공동사업이다. 즉 정보기술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전자도서관 개발과 고도화에 대한 업무적 관심은 남북도서관계 실무자, 책임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작게는 전자도서관 운영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및 기술동향에 대한 도서관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기획, 추진할 수 있다.

현재의 국내 정치환경과 정세에 따라 상호간의 직접적 공동 세미나 개최가 어렵다면 중국이나 일본의 유관협의체나 기업 등과 협력하여, 북측 관련 실무자 및 책임자 등과 제3국에서 미팅하거나 신기술동향에 대한 교육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디지털도서관 구축 및 운영 등 구체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정보트렌드 소개보다는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적 교육내용과 현안 이슈를 기반으로 실질적 정보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과 관계의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 4.4 세미나 및 컨퍼런스 공동기획 및 개최

현재 남북한 도서관 또는 학술정보관리부문 실무자 및 책임자간 서로의 이해수준 및 기관 운영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상당히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정보관리 및 전자도서관 부문 종사자들은 북한의 실상을 잘 모

르고, 북한 전문가들의 경우 남한의 전자도서관과 학술정보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한국의 정보화와 도서관 동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과 동시에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학술정보 생산 및 유통체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어렵다고 분석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2016년 3월 9일 제31차 김일성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이 개막되었다. 이 행사를 통해 '다음세대 통신망기술의 국산화와 도입' 등 260여건의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고 지난 2월 23일에도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과학기술축전이 열렸다(강진규, 2016). 현재 북한 당국은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고도의 정보환경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개발을 북한 경제 회생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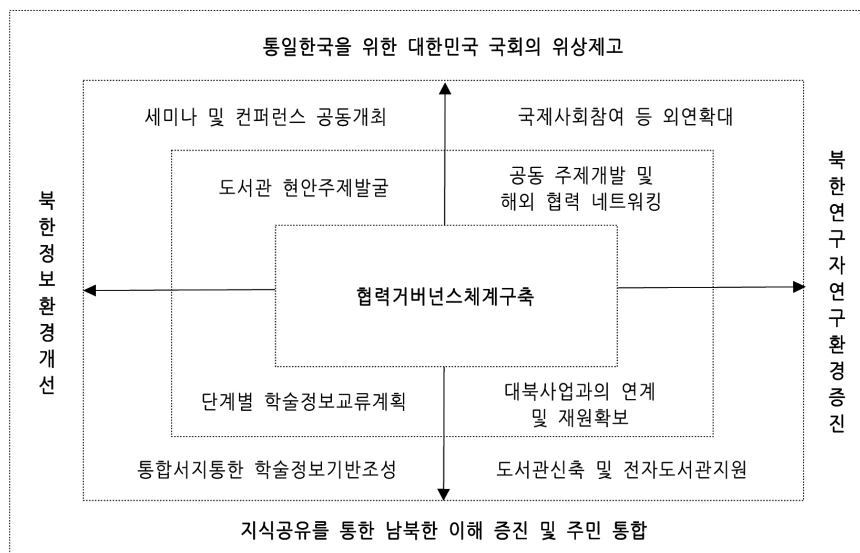
남북도서관교류협력을 통해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설립에 기여한 것처럼 구축된 학술정보를 통해 사회문화 분야의 다양한 통합연구 지원과 도서관업무표준화 및 정보서비스관련 과학기술전망, 도서관의 공정이용을 위한 학술저작물 저작권의 면책범위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력 및 국제적인 공동대처, 과학기술 등 학술분야 연구 동향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발표들을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다양한 관종별 협의체의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컨퍼런스, 집단교육, 세미나 등 교류프로그램 등을 연 단위로 기획하고 있다.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층위와 관종의 핵심이용자집단에 대

한 질적 연구, 이용자교육에 대한 아이디어와 사례공유, 정보화관련 기술의 급격한 변화주기를 고려한 도서관 IT활용기법 등에 대한 교류협력의 자리를 북한의 도서관 정보전문가들과 함께 구성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최신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정보기술 제품이나 소프트웨어 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면 정보기술에 관심이 높은 북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남북관계가 호전될 때 북한에서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가 있고, 일회성, 전시성 행사로 기획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학술생산성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남북한 순환 개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림 2>는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방안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경우에 전개되는 업무들과 발생되는 기대효과를 네 가지 방향에서 모형화한 것이다.

#### 4.5 국제사회 참여를 통한 도서관협력의 외연확대

사회경제적 발전차이에 따라 남북 도서관수준이나 주민의 정보격차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듯하다. 이에 남북 정보환경 및 도서관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을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한정시키지 말고, 정보의 활용성(information literacy)을 증대하는 측면으로 강조한다면 남북협력을 통해 남북의 정보격차를 줄여가는 다양한 방법과 정책적 대안이 모색될 수 있다. 즉 하드웨어적 차원에서 남북 정보환경격차 해소방안은 국제적인 제약, 국내적인 제약, 그리고 안보상의 문제(북한 체제의 특수성 포함)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숙고된 후에 추진되어야 할 분야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교류를 쌍무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국제기구나 다양한 다자적인 기구를 통



<그림 2> 남북 도서관교류협력의 단계 모형

한 방법을 활용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 남북도서관협력은 부수적인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국제기구의 기금을 활용하여 정보소외지역인 북한의 정보환경제고를 위해 북한 도서관 전문 인력에 대한 제3세계에서의 도서관전문가 교육도 전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전자도서관사업 성과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은 과학기술정보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각국의 제재뿐만 아니라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도 인색할 수밖에 없고, 일부 엘리트 집단이나 특정 그룹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능력과 전자도서관의 활용이 우리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남북간 학술 정보기술의 교류적 측면에서 분명 시사점이 높은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국제기구와 협의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및 학술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남북한이 자연스럽게 조우할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의제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안은 정보기술이나 도서관을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주요 기제로 생각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남북협력 혹은 북한의 국제사회 구성원화라는 큰 목적의 달성이 결국에는 도서관분야 협력에도 긍정적 장기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접근이다. 즉 아래로부터의 기능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현실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유념해야 하는 부분은 남북도서관 협력과 교류사업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최종 정책결정권자와 정치인의 이해와 정책적 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남북도서관 교류협력의 안정화와 발

전은 참여자들의 역량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도서관인력에 대한 교육 및 양성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국가의 인재양성은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전문가양성을 위해 국제네트워크와 공조하여 전자도서관이나 정보관리기술관련 선진국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남북 도서관인의 실질적 교류협력 기회를 넓히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은 통일을 대비하여 교육 학술 문화 영역의 발전에 주요 역할을 할 도서관 정보관리 전문분야의 인력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의 도서관변화를 주도할 차세대 전문가를 육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도서관 정보서비스관련 최신기술과 트렌드에 대한 교육과 소통과정을 통해 이념을 초월한 전문직 의식이 함양되고, 남북 도서관인의 연대도 강화될 것이다.

## 5. 결론

북한과의 교류는 사회 정치적 이견이 다수 존재하고, 북한 체제가 지니는 내부적 한계 및 국제관계적 요소 등 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어, 국가적으로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영역이다. 통일을 '과정'으로서 이해하고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단순히 비용과 효율을 따져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정교한 준비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들의 역사적 사명감 또한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에 이 연구는 남북 동질성 회복과 한민족공동체의 실질적 통합을 위해서는 비이념적, 비정치적 교류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연구 필요성속에

서 장기적으로 통일 한국을 대비하여 학술정보 교류협력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정치적 지지속에 남북 도서관협력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단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제까지 도서관분야의 남북교류는 다른 민간 문화교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인지도와 경제적 지원이 저조했었던 바, 남북관계의 질적 변환과 새로운 차원의 교류협력 모델 창출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민국 입법부 차원에서 한반도 전체 주민들의 정보환경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이념적 교류분야에 대해 정치 또는 정책 최고결정권자들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서관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협력 거버넌스체계를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 도서관협력을 통하여 남북한의 비정치적인 학술, 교육문화와 정보기술의 교류가 이루어지면 상호간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신뢰가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는 곧 정치적 통합으로 진전되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다. 도서관은 첨단 정보기술이 강조되는 정보사회의 중추기반시설로서 남북한 정보교류는 타 분야에 비해 현 시점에서 정책적으로도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민족 이해와 정체성확보, 그리고 동질성회복에 있어 주민 생활에 기반한 핵심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북한의 첨단정보기술 개발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김정은 정권과의 실질적 교류의제를 논할 때에도 해당 영역은 남북한이 구체적으로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도서관교류협력을 통한 정보네트워크형성의 중요성은 비정치적 분야

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면 상호간의 이해가 고도화되면서 정치적 통합으로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교류협력은 전문가들의 인적자원 교류를 유발하고, 도서관간 다양한 차원의 협조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

남북한이 신뢰를 바탕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북한사회의 발전과 한민족 통합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 전문분야에서 서로의 강점을 찾고, 이념을 초월하여 전문직 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통, 협력하는 것만이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다. 도서관교류협력의 재발굴은 학술정보를 통한 남북한 신뢰회복과 유대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며 사회문화 및 학술분야의 통합적 통섭적 연구에 있어 전환점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도서관협력은 정보자료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 교류협력사업이므로 타 분야의 교류보다는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협력을 통한 북한의 정보환경 개선 등의 측면에서도 그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통일 한국을 대비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의제를 연구한 이 논문은 미래를 전망하며 관련 정책개발을 모색하는 연구인데, 제시된 계량적 데이터들이 이미 종결된 남북한 문화교류 협력사업에서 산출된 수치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경색된 남북관계속에 표류하고 있는 현재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한계와 수준을 드러내는 지표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고 남북 도서관 학술문화교류사업은 대내외적 외부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정치적 교류의 진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차원의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들었을 경우 상대적으로 정치적 이념적 고리에서 자유로운 학술 문화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장기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미래의 남북교류는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상당한 인내

력을 요구하는 힘든 과정일 것이다. 이에 해당사업의 추진이 가지는 현실적 의미와 민족사적 중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을 기반으로 미래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적 과제들은 차근차근 해 나가는 성숙한 자세가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강영실 (2016). 북한의 정보기술 육성전략과 기술수준. 제11기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교육자료 제16차. 통일교육원.
- 강진규 (2016. 12. 3).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개막. Retrieved from <http://www.dihur.co.kr/1161>
- 권영경 (2016). 남북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과제. 제11기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교육자료 제16차. 통일교육원.
- 김경렬 (2002). 정보산업시대와 계획업무의 정보화. 경제연구, 1(통권114), 29-31.
- 김국신 (2016). 실패한 통일국가 예멘의 교훈. 제11기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교육자료 제12차. 통일교육원.
- 김기현 (2001). 인민대학습당 광명홈페이지. 민족, 21(8), 40-41.
- 김일성종합대학전자도서관 (2015. 12. 18). 통일신문. Retrieved from [http://www.unityinfo.co.kr/sub\\_read.html?uid=19236&section=sc4](http://www.unityinfo.co.kr/sub_read.html?uid=19236&section=sc4)
- 김정수 (2016). 북한 문예정책의 실태와 과제. 제11기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교육자료 제21차. 통일교육원.
- 나황균 (2007). 남북간 정보격차 대응방안 연구. 제4회 남북간 정보격차 해소 학술세미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2009). 2009년도 정기총회안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 백과사전출판사 편 (1998). 조선대백과사전(6).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48-249.
- 북, 모든 분야에서의 정보기술 중요성 강조 (2001. 7. 11). 연합뉴스.
- 사회과학출판부 편 (1971). 력사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35.
- 사회과학출판부 편 (1992). 조선말대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760.
- 성혜량 (2000). 등나무집. 서울: 지식나라.
- 송승섭 (2008). 북한도서관의 이해.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송승섭 (2016). 북한 국가도서관의 발전과정과 그 양상. 인문과학연구논총, 37(1), 479-504.

- 이상호 (2010). 천안함 사태로 드러난 정부대응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정세와 정책, 170(6), 1-4.
- 이우영 (2016). 대북지원 20년: 역사와 의의. 제11기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교육자료 제20차. 통일교육원.
- 전성훈 (2010).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북정책 방향. Strategy21, 13(2), 157-180.
- 정분희 (1993). 남북한 도서관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정성장 (2016). 북한 권력체계의 이해: 수령, 당, 국가, 군대. 제11기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교육자료 제23차. 통일교육원.
- 조왕근 (2007). 남북도서관 교류협력사업사례: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 사업. 한독도서관 컨퍼런스, 독일문화원, 통일부, 한국도서관협회.
- 조정아 (2016). 북한 교육제도와 실태. 제11기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교육자료 제8차. 통일교육원.
- 최기철 (2001). 남북한 정보기술협력방안. 한국어정보학, 3, 132-138.
- 최용환, 김영수, 조봉현 (2009). 경기도의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방안연구. 정책연구(2009-4). 경기개발연구원.
- 통일부 (2016). 북한이탈주민정책 입국현황 통계자료. Retrieved from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 평화문제연구소 편 (2005). 조선향토대백과.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411.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정보격차 대응방안 연구: 통일대비 남북간 정보격차 해소방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황한욱 (2003). 정보산업시대의 생산의 주요특징. 경제연구, 3(통권120), 24-26.
- Dankert, B. (2007). Unforseen experiences: Cooperation, partnership and integration with libraries and librarians of the former GDR and the FDR. Korean-German Library Conference, Goethe-Institut Korea, Ministry of Unification, Korean Library Association.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Cho, Jeonga (2016). The educational system and reality in North Korea. The 11th unification policy leadership program(8).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 Cho, Wangkeun (2007). Case of library exchange & cooperation proje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orea-Germany Conference. Goethe Institut, Ministry of Unification, & Korean Library Association.
- Choe, Keechel (2001). Plan for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orean Informatics, 3, 132-138.
- Choe, Yongwhan, Kim, Youngsoo, & Joo, Bonghyun (2009).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 Local government's perspective. Policy Research (2009-4). Gyeonggi Research Institute.
- Encyclopedia Publisher (1998). Chosun encyclopedia(6). Pyeongyang: Encyclopedia Publisher, 248-249.
- Guen, Youngkyung (2016). Historical process and task of economical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11th unification policy leadership program(16).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 Institute for Peace Affairs (2005). Encyclopedia of north Korean geography and culture. Seoul: Institute for Peace Affairs. 411.
- Inter-Korean Economic & Cultural Cooperation Foundation (2009). Agenda for regular general meeting in 2009. South-North Economy Culture Cooperation Foundation.
- Jeon, Sunghun (2010). Prospect on South and North relations after attack on the Cheonan. Strategy21, 13(2), 157-180.
- Jeong, Bunhee (1993). A study of library and information materi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Jeong, Sungjang (2016). Understanding system of power in North Korea: Leader, party, nation, army. The 11th unification policy leadership program(23).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 Kang, Jinkyu (2016. 12. 3). Opening of science technology festival by Kim Ilsung University in North Korea. Retrieved from <http://www.dihur.co.kr/1161>
- Kang, Youngshil (2016). National fosterage strategy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North Korea. The 11th unification policy leadership program(16).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 Kim, Guksin (2016). Lesson from yemen as the failed unified nation. The 11th unification policy leadership program(12).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 Kim, Jeongsoo (2016). The reality and task of literary policy in North Korea. The 11th unification policy leadership program(21).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 Kim, Keehyun (2001). Grand people's study house. guangmyeong homepage. Minjok, 21(8), 40-41.
- Kim, Kyungryeol (2002). Information industry era and informatization of planned task. Economy Research, 1(114), 29-31.
- 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and Promotion (2004). A study of public measure of information gap: Settlement against South and North information gap. 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and Promotion.
- Lee, Sanghoe (2010). Issues and future measures of government against the attack on the Cheonan. Situations and Policy, 170(6), 1-4.
- Lee, Euyoung (2016). Support to North Korea in 20 years: History and meaning. The 11th

- unification policy leadership program(20).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 Ministry of Unification (2016). Statistic data on entry of North Korean Refugees. Retrieved from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 Nae, Whangkoon (2007). A study of policy measure of information ga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4th Conference of Settlement against Information Ga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and Promotion.
- Social Science Publisher (1992). Chosunmal grand dictionary(1). Pyeongyang: Social Science Publisher, 760.
- Social Science Publisher (1971). History dictionary(1). Pyeongyang: Social Science Publisher, 35.
- Song, Sungseob (2016). Development process of the aspect of national library in North Korea. The Humanities Research Treatise, 37(1), 479-504.
- Song, Sungseob (2008). Understanding library of North Korea.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Sung, Haerang (2000). The rattan house. Seoul: Jeesiknaera.
- Kimilsung University electronic library (2015, December 18). Unification newspaper. Retrieved from [http://www.unityinfo.co.kr/sub\\_read.html?uid=19236&section=sc4](http://www.unityinfo.co.kr/sub_read.html?uid=19236&section=sc4)
- Whang, Hanwook (2003). Main characteristics of production in the era of information industry. Economy Research, 3(120), 24-26.
- North Korea: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every field. (2001, July 11). Yonhapnews.